

# 당정청 내놓은 日 보복 대응안, 알고보니 ‘재탕·삼탕’

## 경제전쟁 전면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정책 중 R&D 1조 투자·기업육성 특별법 작년, 올 3월·6월 발표했던 제도 반도체업계 “20년전부터 나온 말” 민주당 “정쟁으로 접근 지양해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여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내놓은 방책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탕·늑장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의 수출규제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정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지난 4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1조원 투자와 관련 기업 육성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이미 구상했던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방안은 이번 대응 조치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앞서 이날 고위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최소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발표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등에서부터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재·부품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세계화)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

로 대대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발표안은 지난 3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또다시 등장한다. 홍 의원은 단상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 R&D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7월 한 일관계 갈등이 대두하기 전인 6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에서 또 나오기도 한다.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당정청은 수차례 대응 발표 브리핑을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었지만, 내용은 반복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 특별법이 일몰법이란 이유로 R&D 예산을 꾸준히 삭감하기까지 했다. 장기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5년 2863억원에서 올해 2360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사업 예산은 2015년 551억원에서 올해 37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도체 업계도 당정청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쉬쉬하는 모양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국산화를)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야권과 함께 제도·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오기형 간사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뭐하느냐”, “외교로 풀어야지 전면전 이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 규제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인터넷 뱅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은 야당이 동의했던 방안도 정쟁적 사안이면 반대한다”며 “품목 국산화는 주요 경제학자가 3~4년 전부터 이념적 지편과 상관없이 많은 고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 마련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소재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된다”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코스피하단 1850, 내달에나 반등... 코스닥은 예측 불가

## 증시 어디까지... 전문가 진단

6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3년 1개월 만에 장중 19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6.56% 급락한 1891.81까지 떨어졌다. 코스닥도 전일 600선이 붕괴된 데 이어 6일 장중에 14%까지 폭락해 540.83까지 터치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두 개입과 기관투자자(연기금 등)의 대규모 매수로 시장은 낙폭을 줄였다. 코스피는 1900선을 회복해 전 거래일보다 29.48포인트(1.51%) 내린 1917.50에 장을 마쳤다. 또 코스닥지수는 급락세가 이어졌다. 18.29포인트(3.21%) 내린 551.50에 장이 종료됐다.

대외적인 악재로 증시가 패닉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증권사 전문가가 예측한 코스피 밴드 하단 밑까지 추락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증시 하락이 기업들의 실적 악화나 파산 등 이슈가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19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처음이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 컸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확산 뿐 아니라 일본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주



“단기적으로 코스피 큰 폭 ↓ “9월 후 불확실성 다소 해소 “韓日·美中분쟁 예측불가 “연말 정치적 리스크 완화 코스피밴드 하단 1950선” 코스피 하단 1850~1900선” 반등 시점 추론 어려워” 9월·10월께쯤 호전 전망”

도하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라젠이 항암신약 임상3상 시험을 조기 종료했다고 발표하면서 폭락으로 이어졌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밴드 전망치 하단이 1850~1950선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이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지만 9~10월께 이를 회복하면서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코스피밴드 하단은 1980으로 설정했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며 “현재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인 데 증시가 더 하락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파산 위험에 직면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현재 주가는 대외적인 악재에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수년간 우리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는 등 보수적인 경영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적정 가치에 지나치게 디스카운트된 것으로, 향후 적정 가치 이상의 복원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다만 “현재 거시적인 변화

를 찾기 어렵고 미중 무역협상, 한일 외교분쟁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어서 반등 시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증시를 지배하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인데 한일 외교분쟁,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이 거론된 점,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 등 악재가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코스피가 1800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중앙은행의 정책적 노력, 인플레이션 사이클 등과 연말에 정치적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 9월이나 10월 초, 4분기 경 주식 시장이 호전될 것”이라며 코스피 하단은 1900~1950선에서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우리나라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 어디가

바닥인 지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센터장은 올해 연간 코스피밴드 하단을 1950선으로 전망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하락 배경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전쟁,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으로, 상황이 변화돼야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며 “일본 화이트리스트는 28일부터 시행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지 지켜봐야 하고, 미국이 9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9월 이후 상황이 분명해 그 전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증시의 하락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상은 어려워 바닥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상장기업의 순이익 규모는 올해 90조원으로 추정되는 데, 80조원이 1800선이라고 보면 1850~1900 정도가 밴드 하단으로 9월 이후 변화가 일어나야 되돌림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 1면 ‘신라젠 공매도’서 계속 임상3상 조기종료 ‘떡튀 논란’ 불가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의 공매도 수량은 지난 달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1일 1141만주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 달 31일에는 신라젠 공매도 거래량이 갑자기 13만3800주로 급증해 사전 정보 유출의 의혹도 낳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숏커버링) 차익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신라젠은 지난달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40%를 넘기면서,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의 절반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신라젠처럼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대규모 차익을 남긴다. 이날 갑작스레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숏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되사는 것) 물량으로 추정된다. 이날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거래량이 4500만주를 넘어섰다. 지난 이틀간 거래량이 21~23만주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신라젠은 장중 한때 낙폭을 -18%까지 줄이기도 했다.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상3상이 진행되는 순간 회사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은 말도안된다”며 “지분은 미리 세금 등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